

외요세평

황수주

북구청소년상담복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작년 연말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밤 10시. 디센터 유치실무위원회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떴다. "오랜만입니다.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내년 국비 예산이 반영됐다는 기쁘고 벅찬 소식이 있어서 늦은 시간이지만 소식 전합니다." 호남권 국립청소년디센터 공모 실패의 아픔을 겪었던 광주가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복한 쾌거였다. 필자는 작년 1월에 '호남권 국립청소년디센터 광주에 건립돼야', 2월에는 '국립호남권청소년디센터 입지선정 조건'이라는 글을 연이어 기고하며 센터 건립 필요성과 광주의 당위성을 알렸다.

우울·자해 청소년 급증

최근 청소년상담 현장에서는 코로나 이후 우울·불안·자해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디센터는 이러한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속형의 치료재활시설이다. 여성가족부는 디센터를 작년 초에 바로 공모 절차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전북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이 있어서 그랬는지 공모도 하지 않은 센터를 마치 익산시가 선정된 것처럼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필자는 익산시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항의 민원을 접수했다. 그리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기자들은 수정기사를 내

민·관·정 협치로 이룬 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보내기도 했다. 여가부에 센터의 공정한 공모를 위해 건립지 선정 평가지표 작성시 해당 지자체의 사전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수차례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지만 광주시의 의견이 그렇게 반영되지는 못했다. 광주시는 평가지표에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국가차원의 청소년시설의 지역적 안배와 수요자 파악과 지원 인력, 접근성 등의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전북은 김제에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가, 무주에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 국립시설이 이미 2개나 운영되고 있었다. 거기다 익산에 '국립호남권청소년디센터'까지 가지게 가겠다니...

광주지역 청소년계는 센터 유치를 위해 광주·전남·제주지역의 아동·청소년·사회복지·대학·시민단체 등 관련 종사자 240명의 유치준비위원회와 174개 기관이 참여하는 유치준비위원회를 결성해 기자회견과 활동을 이어갔다. 광주시에서는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꾸렸고, 유치실 행위위원회와 실무협의회 가동과 정책토론회 등을 이어가는 유치분위기 조성으로 이번 성과의 마중물이 됐다.

치료재활센터 건립 논의는 2019년 광주시가 여성가족부에 센터 건립을 제안하면서 시작했다. 광주는 센터 건립 준비를 위해 2020년 학계,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기청소년 지원 TF팀'이 운영됐고, 국립호남권청소년디센터 타당성조사 용역이 추진됐다. 2021년 센터 건립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반영됐고, 작년 8월 여성가족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가 있었으나 어렵게도 익산시로 결정됐다. 평가위원단 현장실사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진두지휘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유치 실패 결과를 보고 받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담당 팀장과 직원에게 전화해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지지를 보내며 재도전의 힘을 실어줬다고 한다.

센터 유치 실패에 굴하지 않고 광주시는 자립 준비 청소년의 잇따른 자살과 위기청소년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을 24세까지 확대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을 국회 및 정당, 주무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의 화답으로 작년 11월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이여 기부장관에게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절의를 했다. 이어 국회에서 '청소년 정서행동 치유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성일중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현숙 여가부 장관, 국민의힘 광주시당 김정현 위원장, 광주시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 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결국 작년 연말 정부 예산에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예산 160억원 중 설계비 10억원이 포함되면서 건립 계획이 최종 확정돼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직자 적극행정 쾌거

이번 성과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빛을 발한 결과다. 아울러 위기청소년을 보듬어야 한다는 그 간절함과 사명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늦은 시간은 물론 주말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노력한 광주시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민과 관이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같이 협업하고, 적극 행정과 협치로 이룬 좋은 사례라고 본다.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국민의 힘 광주시당 김정현 위원장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여당과 주무부처를 정치력으로 이끌어난 값진 선물이자, 다시 1년 만에 기본 소식을 새해에 전하면서 그동안 센터 유치를 위해 같이 열망하고 응원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필요적 기재사항' 정확히 기재해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 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돼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물게 된다.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 등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해 공급자는 1%, 공급받는 자는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특례로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해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거래처별로 1억원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해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광주국세청 제공

세무광장

<17>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돼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2022년 2월 15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동주택 복도 적치물 방치 안 된다

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화재 발생 시 고층 아파트의 비상계단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지만 적치물이 있을 경우

고스란히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 적치물은 큰 장애물이다. 화재 발생 시 주민의 대피를 포함해 소방구조대원이 이동할 공간이 부족해지는 만큼 적치물은 삼가야 한다. /이재복 고충경찰서 녹동파출소

독자광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비상구 등에 불법 적치물 문제가 이웃 간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아파트 불법 적치물은 주거지 내 공간이 부족해 개인 살림살이들을 밖으로 내놓으면서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아파트 비상계단에 자주 눈에 띄는 대형폐기물의 경우 처리에 소액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비상구에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다 대형 나무판자나 심지어 비상계단 난간에 자전거까지 걸려 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자칫 대피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돼 있다. 적발 시 소

시설

'복합쇼핑몰 1곳 이상' 시민 기대감

신세계프라퍼티가 최근 광주시에 '그랜드스타필드 광주' 건립 제안을 제출해 주목을 받는다. 어등산 부지에 그랜드스타필드를 건립해 휴양·레저·문화콘텐츠 등의 복합공간으로 2박3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스테이케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다. 17년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개발 사업이 일시에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그랜드스타필드를 건립하면 연간 방문객 3,000만명, 지역민 3만 6,000여명 우선 고용, 22조 7,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한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마련해 상인과 소통하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고 공언한다.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광주와 전국의 쇼핑과 레저, 문화시설의 랜드마크를 세울 수 있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비쳐 지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찍이 전방·일선방직 부지 개발에 '더현대 광주'를 건립하겠다고 나선 현대백화점 그룹은 광주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대측 역시 '더

현대 서울'을 능가하는 쇼핑·문화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직 공개적으로 사업 의지를 드러내지 않은 롯데측은 우치공원 쪽에 복합쇼핑몰과 롯데월드 등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빅3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대형업체의 복합쇼핑몰 유치 경쟁은 지역민의 쇼핑과 레저 등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업체의 의지대로 광주지역 수 곳에 복합쇼핑몰과 레저시설이 들어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광주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이 없으나 복수의 복합쇼핑몰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복합쇼핑몰 예상 부지가 한곳이 아닌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2곳 이상이 세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어떻게 추진하는지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곳 이상이 건립될 가능성에 대해 시민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본다.

올해 1%대 저성장...위기 극복 총력을

지난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신음한 한국 경제가 올해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세계 경기 위축으로 한국 경제 핵심 동력인 수출이 흔들리고, 코로나19 이후 살아나는 듯 했던 내수도 올해 침체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서민 고통을 가중하는 고물가 상황은 쉽게 진정되지 않고 일자리 증가 폭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는 472억달러(약 60조 원)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무역수지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며, 적자액은 종전 최대였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의 2배를 넘었다.

올해 경제는 대형위기에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진한 수출이다. 정부는 올해도 수출이 전년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

다. 수출 감소는 생산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올해 세계 경기 침체가 예고된 상황이니 수출 부진과 이에 따른 생산 부진 흐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복합위기 돌파를 위한 수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와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도 한결같이 올해 위기에 대비한 방어책을 단단히 준비하면서 우리 경제의 비효율·위기 요인을 제거하고 차세대 먹거리를 육성하는 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산적한 우리 경제의 위험 요소를 철저히 관리해 올해를 '위기를 극복하는 해'로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욱 고단해지는 서민들의 일상을 보살피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지원, 고용 회복에 사달릴 청년층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 또한 제때 마련돼야 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제1의 화두이자 과제로 삼고 모든 주체가 필사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내 집 앞 눈썰기' 조례 선제적 홍보를

기지수첩



김혜린

사회부 기자

"내 집 앞 눈썰기? 그런 조례가 있어요?" 지자체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이면도로 주택가 등 저층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내 집 앞 눈썰기' 조례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인지도 못해 유명무실하다.

광주·전남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그치지 않으면서 여전히 도심 곳곳에는 눈이 쌓여있다. 눈은 눈이 얼어붙은 도로와 골목길이 빙판길로 변하면서 낙상 사고와 추돌 사고는 한 주 내내 잇따랐다.

실제 지난달 22일부터 사흘간 광주지역에 최고 40cm의 폭설이 쏟아졌다. 하루 동안 내려 쌓인 눈을 의미하는 신적설량은 1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에 시민들은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워달라'는 민원 전화와 함께 제설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눈이 내리기 시작한 지난달 22일부터 제설작업을 시작했지만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해 보도, 골목길, 급경사지 등 제설 취약도로의 제설작업은 미흡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큰길은 시청에서, 작은 길은 구청에서, 골목길은 시민이'라는 원칙으로 제설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5개 자치구가 제정한 일명 '내 집 앞 눈썰기' 조례(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차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을 해야 한다.

폭설 피해를 취재하기 위해 도심 곳곳을 다녔던 지난 일주일 동안 일반 시민들이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는 모습을 목격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 권고적 성격의 조례이고 시민의식이 저조한 탓이었을까. 인터뷰를 진행했던 대부분의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 눈을 치우는 일이 귀찮아서가 아닌 해당 조례가 있는 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워 지자체 손길이 닿기 어려운 이면도로는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시민들이 스스로 눈을 치우는 의식과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선제적 홍보가 필요하다.